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경제의 진로모색과 시사점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연구위원
jung@kiep.go.kr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연구위원
keiokim@kiep.go.kr

이형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hklee@kiep.go.kr

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일본팀 전문연구원
eunji@kiep.go.kr

이우광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위원
wklee@kjc.or.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경제는 또 다시 불황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의 경제위기 및 엔고로 인하여 선진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수출이 급격히 위축되었음.
 - 대내적으로는 엔고, 높은 법인세율, 자유무역협정의 지체, 엄격한 노동규제, 환경규제의 강화, 전력부족 등 이른바 6중고가 일본기업의 경제활동을 압박하였음.
- 위와 같은 단기적 요인 이외에도 일본경제를 위협하는 중장기적 요인들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이것이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일본경제를 위협하는 중장기적 요소로서는 잠재성장률의 지속적 하락,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내수시장의 축소를 들 수 있음.
 - 2000년대 약 0.5% 수준인 일본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취업자 수의 감소와 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로 인하여 2020년대에는 0.1%, 2030년대에는 ▲0.3%로 하락할 전망이다.
 - 무역특화지수를 통해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하면, 컴퓨터, 의약품, 가전은 2003년 이후, 통신기기는 2007년 이후, DVD, 유기화합물, TV는 2008년 이후, 철강, 플라스틱, 중전기기, 비철금속은 2010년 이후 국제경쟁력을 상실(무역특화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국내 소매판매의 대표적 지표인 백화점 판매액은 1996년을 피크로 연속 감소, 슈퍼마켓은 1991년을 피크로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차 판매대수는 2000년을 피크로 계속 감소하고 있음.

2)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일본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섯 가지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정책대응을 고찰하고 한국경제운용에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다섯 가지 정책분야는 ① 제조업 국제경쟁력 강화, ②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③ 재정과 사회보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④ 무역·투자자유화전략, ⑤ 신에너지전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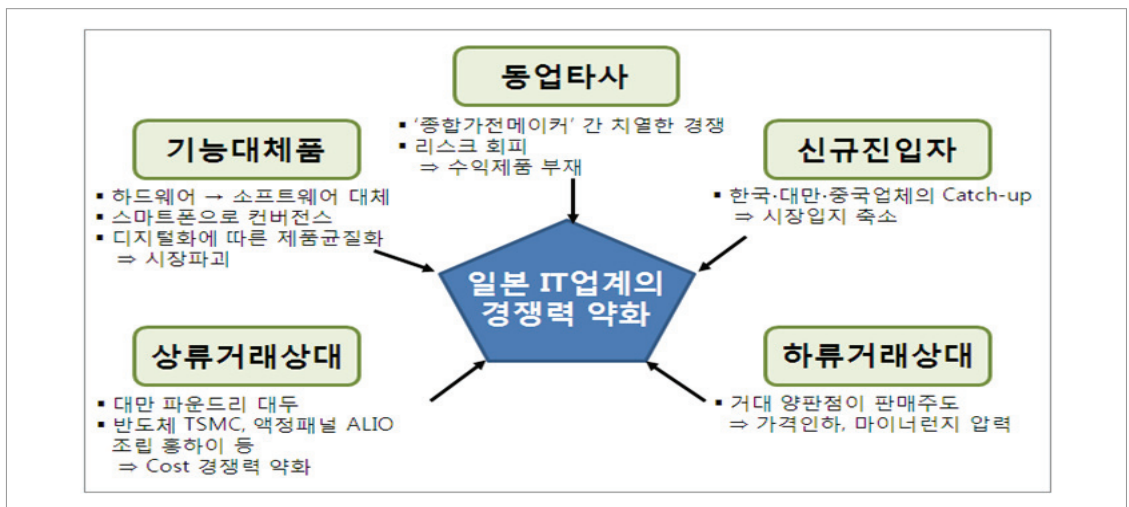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한·일협력

-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무역특화지수, 교역조건 등을 기준으로 고찰해 보면, 상당한 품목에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무역특화지수 추이를 보면, 지금까지 일본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근년 경쟁력 저하가 두드러진 반도체와 액정패널, 약간 경쟁력저하 기미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공작기계로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음.
 - 주요 산업의 교역지수를 보더라도 정밀기계, 수송기계, 일반기계 등 기계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교역지수가 약화되고 있음.

-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는 엔고의 영향인데, 호황기 때 상대적인 엔저 수준으로 인한 수출 증대로 경기를 견인해 왔으나, 리먼 쇼크 이후의 급작스런 엔고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었음.
 - 둘째는 리먼 쇼크 이전까지 일본의 주요 산업이 수송·전기·일반기계의 내구재산업 중심으로, 주로 고급제품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구조였기 때문임.
 - 셋째는 중간재, 즉 소재·부품·장치 등 생산재의 일본국내 생산을 리먼 쇼크 이후에 유지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임.

[그림 1] 일본 전자산업의 경쟁력 약화 배경



자료: 三品和廣, 「日本エレクトロニクス總崩壊の真因」, DIAMOND online, 2012, 2, 17에서 작성.

- 넷째는 일본 국내의 입지여건이 악화되었고 내수부진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임.
- [그림 1]은 일본 전자산업의 경쟁력 약화 배경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은 다른 산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이처럼 일본제조업은 구조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으며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파괴된 공급망을 복구하고 국내의 사업여건 악화와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음.
 - 해외진출 패턴도 종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진출지역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임.
 - 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국내의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내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제조업의 구조적 변화는 한·일 경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한·일 무역구조는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가 특징인데, 2011년 이후 이러한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본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는 점, 한국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이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 이와 더불어 최근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이 급증하고 있어서 일본제조업의 구조변화를 대일 기업유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높아졌음.

2)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

- 일본정부는 2012년에 「일본재생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이 국가전략에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육성전략이 포함되어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특히 그린성장전략과 라이프성장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일본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책을 분석하였음.
- 그린성장전략은 2020년까지 50조 엔 이상의 수요를 창출하고 14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부품소재, 차세대자동차, 축전지, 해양개발·이용, 스마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산업육성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라이프성장전략은 2020년까지 50조 엔의 수요창출과 284만 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적 의약품·의료기기 창출, 재생의료를 통한 최첨단 의료 추진, 바이오뱅크 구축을 통한 차세대 의료 실현, 간병 및 의료현장에서의 로봇 기술 활용 등의 구체적 시책을 추진할 방침임.
- 이러한 신산업 전략은 구체적인 수치목표와 상세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실현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함.

3)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개혁

- 일본 민주당 정부는 사회보장과 세제의 통합적 개혁을 추진해 왔음.
 - 2010년 10월, 정부·여당 사회보장개혁추진본부의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하였고, 2012년 8월, 8개의 사회보장·세제의 통합개혁 관련 법안이 성립되었음.
- 일본정부가 이처럼 사회보장과 세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한 배경에는 일본의 열악한 재정 및 사회보장의 여건이 있음.
 -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200%를 넘고 있고 정부 일반회계에서 일반지출 중 절반 이상을 연금·의료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관련 지출이 차지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 연금과 공공 의료보험은 미가입 및 미납 문제가 심각하고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통합개혁의 핵심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현행 5%의 세율을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인상할 방침임.
 - 다만, 경기탄력조항이라는 단서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를 시행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함.
- 위의 통합개혁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으며 그 정책적 효과 또한 불확실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음.
 - 소비세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화 효과는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이며,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을 조합한 단일 공적 연금제도의 도입을 핵심으로 한 연금제도 개혁도 유보된 상태임.

4) 대외경제정책의 강화

- 일본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정책은 여타 경쟁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특히 일본의 무역자유화 정책은 한국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미국 및 EU와 같은 거대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반면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비판을 배경으로 일본정부는 최근 EU와의 FTA 협상 개시, TPP 협상참여, 이를 위한 국내여건정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속도는 여전히 느린 편임.
 - 일본의 투자정책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정부의 지원여부와 상관없이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시책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정책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으나 정책대응의 강도가 낮고 일본의 국내입지경쟁력이 취약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음.
- 이런 점에서 볼 때 일본의 무역 및 투자정책은 향후 예산과 정부조직 등 측면에서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글로벌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음.

5) 신에너지 전략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커다란 변혁기에 직면해 있음.
 - 일본 에너지 정책의 핵심 분야는 원자력 정책, 재생에너지 정책,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세 가지 분야임.
- 원자력 정책에서는 향후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서 원자력에 얼마나 의존해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임.
 - 이 점에 대해 일본 민주당 정부는 2030년대까지 원자력을 완전히 철폐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12년 총선에서 승리한 자민당의 아베 정부는 이를 철회할 것으로 보임.
- 재생에너지 정책에서는 재생에너지 의존도를 어느 수준으로 하며 이를 보급하기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임.
 - 일본정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많이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전력산업 구조개혁에서는 송배전망의 관리방식, 전력소매의 자유화 범위, 전력요금의 자유화 등이 핵심 쟁점임.
 - 민주당 정부는 송배전망의 독점구조를 철폐할 것, 전력소매의 완전 자유화, 전력요금의 조건부 자유화를 기본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음.

3. 정책 제언

● 제조업 국제경쟁력 약화와 시사점

- 일본기업의 실패요인은 고품질 집착, 생산현장과 기술 집착, 글로벌 경영전략 부재, 글로벌 인재양성 부족 등으로 분석됨.
- 시사점: 과거의 성공모델 집착은 금물, 신흥국 기업과의 가격경쟁은 가능한 회피가 최선, 철저한 글로벌화 추구, 글로벌 대기업 양성 및 지원, 대기업 독과점 문제는 글로벌 경쟁력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함.

● 내수시장 축소와 시사점

- 일본의 내수는 일본경제를 지탱해 준 버팀목이며 탄탄한 내수시장 유지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나 지나친 내수시장 의존체질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일본기업은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보다 내수시장을 둘러싼 경쟁을 더욱 중시한 나머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음.
-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에 대해서도 지나친 신뢰는 금물이며 오히려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한 정책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음.
 - 일본의 내수주도형 성장전략을 주장하는 논리에는 많은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일본은 이미 인구감소사회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인위적인 내수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재정확대나 사회보장 강화를 통해 이를 확대하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 사회보장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 약화와 시사점

-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사회보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인구동태를 고려한 연금, 건강보험, 개호보험 등의 제도설계가 필요함.
 - 따라서 최소한 30년을 내다본 장기계획의 수립이 시급히 필요함.
- 부과방식이 아닌 적립방식의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사회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정치적 유혹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재정과 사회보장의 통합적 운영을 위해 예산 및 정부조직의 개혁이 필요함.

● 무역·투자자유화의 지체와 시사점

- 일본정부는 최근 TPP, 일·EU FTA, RCEP, 한·중·일 FTA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으나 자민당은 이들 협상에서 민주당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음.
-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목적은 아시아 공동체 구축이라는 이념이 아니라 아직은 동아시아 개도국의 시장경제제도를 심화시키는 것임.
- 한·중·일 3국의 협력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이것이 주축이 된 동아시아 경제통합 구축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 따라서 한국은 기본적으로 미·중·일과의 등거리 유지를 기본전략으로 하되, 미국이 중심이 된 TPP, 중·일이 주도하는 한·중·일 FTA, 아세안이 주도하는 RCEP에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국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함.
- 한·일 협력의 관점에서 한·일 FTA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에너지전략과 시사점

- 확대 일변도의 원자력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함.
- 송배전망 관리, 전력요금 자유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과 관련된 전력산업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의 개시가 필요함.